

국무위원 자원 배분회의

어떻습니까? 우리가 탐다운 예산을 몇 년도부터 시작했죠? 2004년에 시작해 2005년부터 시작한 것이죠. 중기 재정계획은 언제죠. 그것도 같이한 거죠. 중기 재정계획하면서 탐다운 시작한 거죠.

이번에는 내년도 예산을 협의하게 되는데 여기에는 장기적인 전망까지 포함하고 있습니까? 세입의 문제는 다음에 하고, 세출은 일부 장기적인 것, 올해 중에 대개 장기적인 전망을 정리하게 될 거죠? 제가 이런 질문을 드린 이유는 우리가 새로운 시도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국가 예산 운영을 새로운 시스템으로 가고 있고 그렇게 발전하고 있다는 것을 공유하기 위해 여러분이 함께 듣는 자리에서 질문 던졌습니다.

복지예산 확충의 방안

지금 복지 분야에 있어서 정부지출의 규모가 원체 작은 규모입니다. 복지 제도가 있다 하기에 창피할 만큼 복지 지출 수준이 낮고, 이런 상태에서 고령화내지 고령사회 진입이 빠른 속도로 진행되고 있어서, 고령화시대 대비에 대한 대책을 세워야 하는 시점에 놓여있습니다. 양국화가 빠른 속도 진행되는데 이런 상황 변화를 반영해야 합니다. 미래 시대 대비 과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돈만 많이 있으면 해결되는데 돈이 많이 없습니다. 함부

로 거둘 수 없고 예산 최대한 아껴 쓰자는 것이 우리의 과제입니다. 경상경비를 최대한 절약하기 위한 노력을 합시다. 그 다음에 지출 항목 간에, 지출 분야 간에 구조조정을 최대한 해서 다른 예산을 줄이고 복지예산, 미래대비 예산을 확보해 봅시다.

그 다음 수단이 조세감면 규모를 최대한 줄여봅시다. 그 다음 아직까지 노출되지 않은 세원, 좀 이렇게 누락되고 있는 세원을 최대한 발굴해 봅시다. 이것이 국민 부담을 늘리지 않고 재원을 늘리지 않는 중요한 방법으로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번 토론에서 세원발굴의 문제나 조세감면 문제를 본격적으로 다루기 어렵지만, 앞서 말한 예산 절약, 경상경비 절약 문제, 분야별 재정지출의 규모를 구조조정하는 문제가 우리에게 필요한 문제이고, 우리가 주로 다루어야 할 문제입니다. 이것은 실질에 있어서 필요한 문제지만 국민들의 신뢰를 확보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 하는 분야입니다.

행정수요 증가와 이를 구조조정해야 하는 모순, 어떻게 조화시킬 것인가?

요즈음 우리 스스로 보고받거나 토론해 보면 새로운 재정수요가 아주 많습니다. 각 부처에 대한 언론보도를 보면 어느 부처 할 것 없이 우리의 행정서비스 수준보다 더 향상시켜야 할 시점이고, 모든 부처의 행정수요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한편, 구조조정해야 하는 모순이 있습니다. 이것을 어떻게 조화롭게 풀 것인가? 이 시점에서 적절하고 균형 잡힌 예산 편성이 우리의 과제입니다. 각 부처가 어려울 것입니다. 장관님들은 예산을 잘 지켜내고 많이 따가야 부처 공무원들에게 체면이 서고, 각 부처마다 고객이 있는데 고객들에게 충분한 서비스 할 수 있고, 국회의 상임위원회가 장관에게 부처 예산을 확보하라는 압력도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처지가 편하지 않는 것은 잘 알고 있습니다. 거시적으로 보고, 합리적으로 운용해 미래사회에 대비하고 사회 발전운영을 위해 과감한 양보와 결단 필요합니다.

오늘 결론을 내지는 않을 것입니다. 어떤 것이 더 시급하고, 어떤 예산이 더 중요한가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의 공감대 같은 것을 확보해 나가는 과정입니다. 부처 장관 처지에서는 물론 제일 중요하지만 그러나 대통령이나 총리, 기획예산처 장관 처지에서 다 들어줄 수 없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기획예산처의 1차 시안을 가지고, 총리실과 청와대가 적절한 예산 배정을 해 나갈 것이지만 오늘 후회 없이 충분히 주장해도 됩니다. 한편 무엇을 양보해야겠다는 마음의 각오도 준비하는 토론이 되었으면 합니다. 열심히 토론에 참여해 주장이 사리에 맞지 않는다고 싶더라도 그 점을 기억하지 않겠습니다. 마음 놓고 말해 주십시오. 다 받아들이지도 않겠지만 기억해 놓고 인상 쓰지 않겠습니다.

대통령은 시스템에 관한 것을, 총리는 정책에 관한 것을 주재할 것

총리도 국무회의에도 당분간 참석하겠지만 기본원칙은 이전과 같이 같습니다. 이 총리 때와 같은 원리로 움직입니다. 청와대 많은 참모가 있습니다만, 청와대 조직을 조정하지 않았지만, 실제로 업무 처리에 있어서 총리실을 지원해 왔습니다. 심층적 연구와 분석이 어려운 문제나 위원회의 도움이 필요할 때, 청와대가 연구하고 부처에 대해서도 여러 가지 정보나 의견 제공한 것처럼, 총리실에 제공해 왔습니다. 대통령을 거치지 않고 바로 보고하기도 하고. 총리에 대한 자문역할은 그 동안 했듯이 총리실은 물론 청와대가 총리 보좌하겠습니다. 대통령이 간여하고 책임지는 문제를 제외하고 총리를 보좌하도록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대통령의 직접적인 관심은 일하는 제도와 문화입니다. 일처리 내용에 대한 관심보다 일처리 시스템을 어떻게 합리적으로 조직할 것인가에 대해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월요일 수석보좌관 회의에 참석해 주재하는데 일하는 제도, 일하기 위한 제도, 절차, 과정, 문화 이런 것에 대해 토의하고 결정해, 부처에 확산하는

것에 관심이 있습니다. 어제 오늘 아시듯이 외교, 안보, 통일 이런 주제에 관해서는 내용에 이르기까지 직접 관장합니다. 대통령이 국군통수권을 가지고 있고 위임하고 이양하기 쉽지 않고, 국가원수로서 위기관리 대표적이기 때문에 총리를 거치지 않고 처리하고 있습니다. 정책 내용, 결정 관련 포함되는 예산, 자원제도는 또한 같이 움직이기 때문에 총리가 관여할 여지가 많습니다. 외교안보정책의 집행과정은 대통령이 관장합니다. 기관들의 자원, 인적자원의 배분은 총리와 협의해 처리하겠습니다. 이런 기초 위에 국정을 운영해 나갈 것입니다. 이 점 참여하신 국무위원께서 알아주시 바랍니다.

대통령이 국무회의 참석하더라도 시스템에 관한 것이고 정책에 관한 것은 총리가 주재해 하실 수 있도록 방향 잡고. 나중에는 국무회의 참석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대통령이 국무회의에 참석하더라도 제도, 혁신에 관한 문제에 집중될 것입니다. 오늘 알찬 토론하시기 바랍니다.